부적합한 대기오염 지표, 알고도 공표 강행했다

'금타 화재' 관련 광주시·영산강환경청 잘못된 정보 발표 논란

시 "미미한 수준"…체감피해와 측정결과 괴리 발생으로 '안전 오인'

"지역민 불안감 잠재우기" 의혹 … 두통·구토 등 피해 신고 3433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사건과 관련된 광주시의 잘못된 정보는 자칫 시민들에게 유해 대기 오염물질로부터 "안전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공공기관이 대부분의 대기오염 수치를 측정하고 공개하는 현재 실정을 고려하면 임의적으로 기준을 적용하면서 자칫 '외출해도 문제없다, 안전하다'는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민들이 많아졌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2일 광주시와 영산강유역환경청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발표하면서 영산강환경청이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등 59종 측정 결과, 불검출 되거나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표가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광주시는 이를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했다. VOCs에 대한 대기환경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고용부의 작업환경 기준을 참고했다는 게 광주시의 입장이다.

하지만, 해당 측정 기준이 작업장 내 근로자를 바탕으로 한 기준으로 어린이·노약자 등 일반 시민들 포함했을 경우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알고도 별다른 설명 없이 자료를 발표, 시민들에게 근거 없는 안전함을 불러오게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이라는 고시를 통해 '대기오염의 평가 또는 관리상의 지표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칫 잘못된 해석을 불러올 수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광주시는 당시 대기측정을 통해 대기환경기준이 적정하다고도 했다. 광주시가 측정한 대기환경 기준만 발표했어도 됐지만, VOCs 측정결과까지 발표해 지역민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점이다.

광주시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가 발생한 지난 17일부터 21일 오후 3시까지 광주 전역 대기측정망(11대)과 공장 인근지역에 대기측정차량을 배치해 미세먼지(PM-2.5, PM-10), 오존(O_3), 이산화황(SO_2), 이산화질소(NO_2), 일산화탄소(CO) 등 대기환경기준 오염물질 6개 항목을 측정해 공개했다.

모니터링 결과, 공장 주변지역은 화재 당일인 지난 17일과 18일은 6개 항목 모두 대기환경기준 이하로 측정됐다. 하지만 사고 직후 화재 온도로 대기질로 확산됐던 오염물질이 낮은 기압에 따라 하강하고, 잔불 처리로 인한 비산먼지가 발생하면서 19일에는 (초)미세먼지가 기준치 이상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 경우 당초 영산강환경청으로부터 정확한 기준 없이 단순 측정 자료 위주로 받아 보다가, 보도자료 배포 과정에서 처음으로 TWA(시간 가중 평균 노출기준)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화재 당시 검은 연기가 몰려오고, 일부 시민들이 기침과 구토, 어지럼증을 호소했는데도 기준치 미만이라 괜찮다고 하면 실제 체감 피해와 측정 결과 간 괴리가 발생한다"면서 "차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 없이 그저 '안전하다'는 발표는 지역민이 잘못 해석할 수 있는 시그널을 준다"고 말했다.

환경부 국민환경보건기준에는 TWA 대비 유기화학물 종류가 상당히 미반영돼 있는 만큼 대기환경기준의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송창영 한국재난안전기술원 이사장은 "현재 휘발성기화학물을 모두 포함하는 다른 기준이 국내에 미비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22일 기준 광주시 광산구에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에서 발생한 연기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6097건 접수됐다. 이 중 두통·구토 등 인적 피해 신고는 3433건이며, 물적 피해 2009건, 기타 655건 등이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아! 나무조각 때문에…

금호타이어 "생고무 가열 설비에 이물질 섞이면서 화재" 주장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는 원재료 가공 과정에서 기계에 나무조각 등 '이물질'이 섞이면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관계자는 22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원재료인 생고무를 가열하는 설비인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장치 내에 생고무와 함께 이물질이 섞이면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천연 재료인 생고무를 이용하다 보니 고무에 딸려 온 나뭇가지 등 이물질이 섞여 있을 때가 있는데, 여기에서 불이 났다는 것이다.

공장 측은 이번 화재로 총 7개 타이어 생산 공정 중 4개 공정 설비가 불에 탔다고 설명했다. 정련(생고무에 화학 약품을 혼합하는 공정), 압연·압출(고무를 반제품으로 만드는 공정), 재단(반제품을 일정 크기로 자르는 공정) 등으로, 화재 당시에는 공장 전체에 500여명이 근무 중이었으며, 화재 지점에서는 34명이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 직후 자동 이산화탄소 소화 약재가 분사됐으나 불길이 잡히지 않았으며, 여기에 물을 뿌리니 매연이 발생해 직원들이 대피했다는 것이 공장 측 설명이다.

방화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매달 예방 점검을하고 있으며 지난달 점검에서는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공장 측은 구체적인 피해 상황이 집계되지 않아 공장 재가동 여부와 시점, 공장 작업자 재배치 여부 등은 아직 불투명하다는 입장이다.

김명선 금호타이어 부사장은 "지역 주민들이 최대한 빨리 평상의 일상을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전두환 고향 주민들 "전두환 잔재 청산 법 만들자"

합천서 온라인 서명운동 전개

5·18 광주 학살의 주범 전두환씨의 고향인 경남 합천군 주민들이 전씨 잔재 청산을 위한 법을 만들자는 취지의 온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생명의숲되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운동본부)는 최근 5·18기념재단, 광주시민단체협의회 5·18특별위원회와 함께 '전두환공원폐지와 잔재청산법안 입법촉구서명운동'(https://forms.gle/5YxvEc6trFDxyLJCA)을 시작했다.

운동본부는 서명운동을 통해 경남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에 있는 '일해공원'의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원 이름 '일해'는 전두환씨의 아호 일해(日海)에서 따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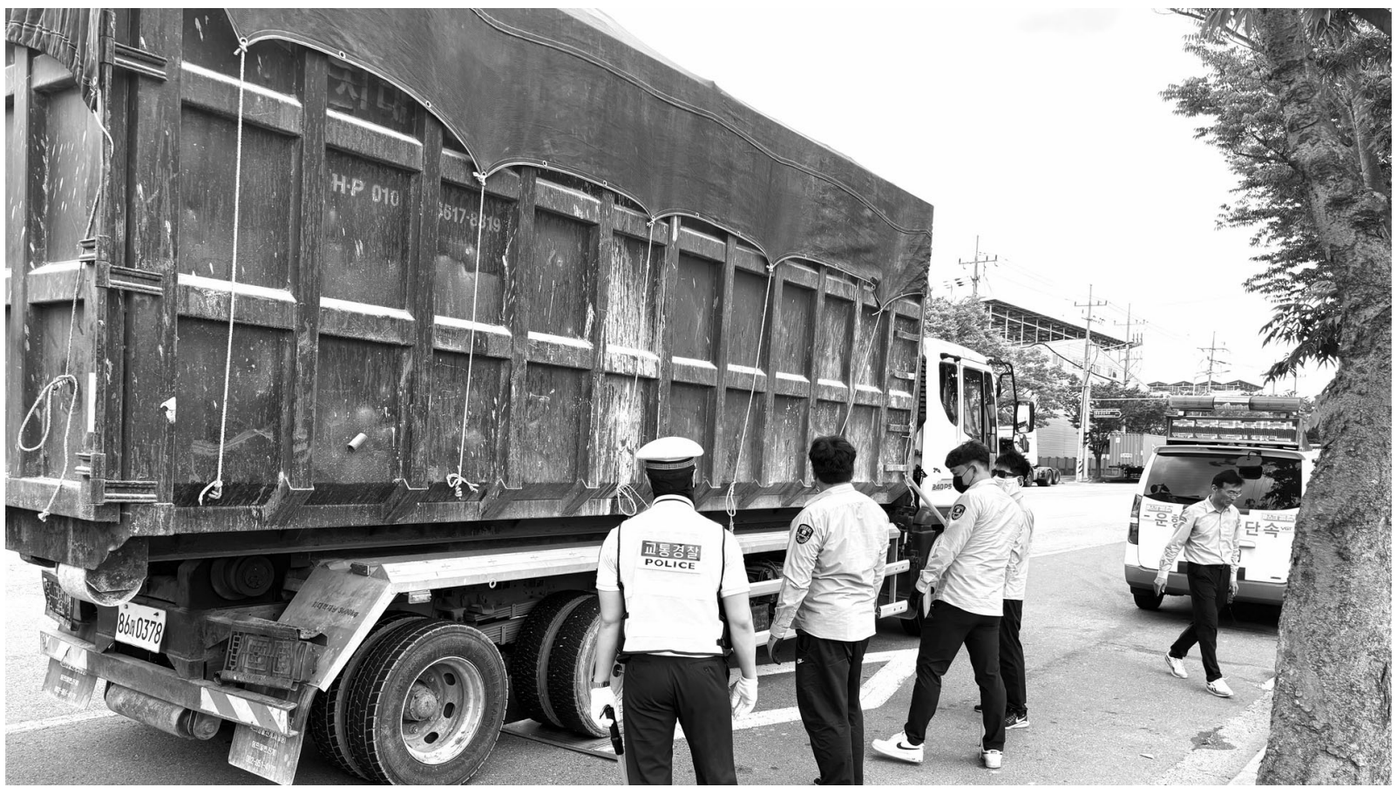
이 공원은 지난 2004년 '새천년 생명의 숲'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으나, 합천군은 2007년 공원 이름을 일해공원으로 바꿨다.

운동본부는 또 합천군 전두환 생가에 남아있는 '박정희 시해 수사과정에서 12.12 사태가 빚어졌다', '단임 약속에 따라 헌정사에 스스로 물러난 최초의 대통령' 등 왜곡 문구도 없애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운동본부는 과거 전두환 잔재청산법 제정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내고 10만 5685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에 냈지만, 국회는 최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 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한편 운동본부는 지난 5월 17~18일 광주를 찾아 같은 내용의 서명운동을 전개해 4420명의 서명을 받아냈다.

/유연재 기자 yjyou@



광주경찰청과 광주시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 21일 광주시 광산구 평동산업단지 일대에서 화물차량 합동단속을 하고 있다. 〈광주경찰청 제공〉

화물차 법규 위반 단속했더니…2시간 새 무려 118건 적발

경찰, 평동 산업도로서 합동 단속

경찰이 광산구 평동 산업도로에서 2시간 동안 무려 118건에 이르는 화물차들의 법규 위반 행태를 적발했다.

광주경찰청과 광주시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21일 오후 2~4시 광주시 광산구 평동산업단지 일대에서 화물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여, 118건의 법규 위반 차량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화물차 적재제한 위반 등 안전기준 위반 7건, 불법 구조변경·튜닝 위반 5건, 운수사업법 위반 13건, 안전띠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 93건 등이었다.

경찰은 화물차량이 교통사고를 낼 경우 중상·사망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화물차 불법 행위를 근절하자는 취지로 이번 단속을 시행했다. 최근 3년 동안 광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2022년 7076건, 2023년 6915건, 2024년 6849건 등이다. 이 중 화물차 사고는 2022년 738건(10.4%), 2023년 692건(10.0%), 2024년 657건(9.6%) 등이다.

전체 사망사고 중 화물차량으로 사고 비중은 2022년 57건 중 8건(14.0%), 2023년 47건 중 7건(14.9%), 2024년 40건 중 5건(12.5%)으로 비중이 높았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화물차로 인한 교통사고는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화물차량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화물차 불법행위 근절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